

포스트 코로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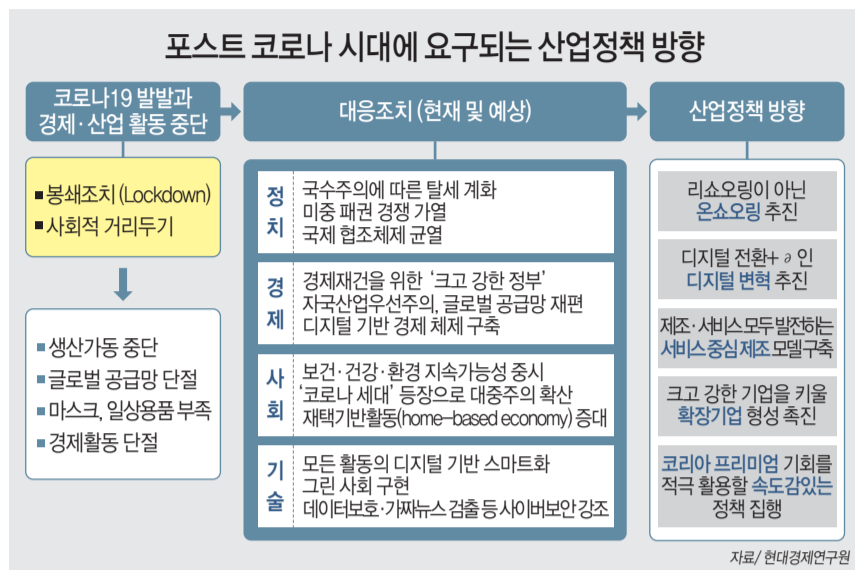
온쇼어링 정책 강화... 美·中 대응 '확장기업' 창출

〈국내 제조활동 활성화〉

산업연구원 '자국 중심·디지털' 제조업 중요성·디지털 기술 부각 미래 산업정책 초점, 안정성 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을 더욱 앞당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내 제조기반을 위해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미국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 즉 '확장기업' 창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급부상한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혁 등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4일 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조치로 모든 경영자원의 이동이 제약을 받아 경제산업의 전반적 활동이 마비되고, 기존 산업체제가 취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중간 갈등을 비롯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비대면 인

프라 등 디지털 기술이 부각되는 등 환경변화로 코로나19 이후엔 새로운 산업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각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취하면서 ▲생산 가동 중

단 ▲글로벌 공급망 단절 ▲마스크·일상용품 부족 ▲경제활동 단절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이장근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을 해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자국의 제조기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국중심'과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비접촉을 위한 '디지털'을 주요 키워드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효율성과 성장성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산업정책의 초점이 '안정성 중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정성을 보충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 다변화, 자국 산업 육성, 국제협력 네트워크 재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대상 수출 제한, 인수·합병(M&A)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디지털 전쟁' 조치가 우선 대두할 것

이라고 내다보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자국으로 다시 유인하는 '리-쇼어링'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육성, 해외 업체 유치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제조 활동을 활성화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차이내머니,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 글로벌 ICT업체의 내수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제휴 ▲중소벤처기업간 협력 ▲핵심기술분야 R&D 생태단지 조성 ▲업종별 표준 플랫폼 개발 ▲공동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국내 기업간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서비스비중 확대 등 산업 구조 재편차원에서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을 추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직워커 증가 등 노동시장 재편... 자영업, 혁신 창업지원 절실

〈임시계약 맺고 일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 성장모델 필요" 공정한 배달환경 확립해야 지역 대학 연계 디지털 교육 마련

코로나19가 경제·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생태계도 온라인 쇼핑 확대→자영업 매출 감소→온라인 서비스 확대→상가 임대료 감소→자영업 창업 증가→자영업 경쟁 과열 등 연쇄 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관측이다.

또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 워커(Gig worker)'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재편으로 비임금근로자들의 지위도 수시

로 바뀔 것이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공공 배달앱이나 장보기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재편을 염두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자영업 성장 모델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보호 정책과 혁신 성장 정책을 구분해 자영업 분야에서 신업종·신제품·신서비스 등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4일 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디지털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자영업 시장에서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경쟁 요인 가운데 대형종합소매점 매출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자영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수와 자영업 매출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았다.

또 인건비가 오르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수록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숫자도 덩달아 증가했다.

중기연구원 정은에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자영업 매출액이 증가해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창업이 늘어

나지만, 창업의 증가는 다시 전체 자영업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다산다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이같은 뉴노멀의 산업 구조를 재편시키는 만큼 새로운 시장 구조에 맞는 자영업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O2O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별 공공 배달앱과 장보기 서비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맞는 수수료 체계 표준화, 라이더 라이선스 제도화 등 공정한 배달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대형종합소매점의 남은 주차장 정보를 공유해 자영업자들의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공유경제

모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과 온라인간 공정거래환경 조성, 꽃·커피·제과 등 다른업종들끼리 소비자 동선에 따라 시너지가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형 프랜차이즈 모델 도입 등도 아이디어로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이 매출을 올려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혁신 창업을 기반으로 온디맨드 및 비대면 서비스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혁신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자영업자 디지털 교육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도마 위에 오른 '수업 질'... 대학 재정지원은 오히려 삭감

유은혜 "재정지원사업비로 수업 지원" 대학 특별장학금 지급 제한... 정부 불허

올해 대학 재정지원사업비가 정부 추경안서 503억원이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최근 재정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막상 정부는 추경안에서 사업비를 대폭 줄일 것이라 계획을 내놨다.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며 '수업 질'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원격수업 지원에 활용될 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경우, 대학생들과 대학 측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0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업 예산은 6.3% 삭감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와 자율혁신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43개교가 8031억원을 받는다.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각 대학별로 사업비 30%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규정상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요청을 이어가자, 각 대학은 정부가 이 용도 제한을 풀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활용할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등록금이 10여년 간 동결돼 대학생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괄적인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학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반환 논란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가 대학가에 돌았다.

유 부총리는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보면, 사업비 가운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성과보수 형태로 제공되던 금액이 25%



올해 대학 재정지원사업비가 정부 추경안서 503억원이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뉴스

줄었다. 추경안이 통과할 경우, 1유형 자율협약형은 131개 대학에 지원될 예산에서 3억7000만원씩 약 486억원, 2유형 역량강화형은 12개 대학에서 1억4000만원씩 17억원을 삭감된다.

성과보수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사업비를 연도별로 쪼개 주는 방식이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대학은 기존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전면대학 혁신지원사업도 3908억원에서 3644억원으로 264억원 줄어든 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등록금 반환 이슈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 반발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2020년 지출 계획은 사업비 정산 배정을 전제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